

광주 세하택지개발지구 어떻게 되나

문화복합단지 등 대안 검토

개발정보가 유출되면서 사업체 자체가 전면 백지화된 광주시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향후 어떻게 될까.

개발계획 도면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열풍과 경찰수사 등으로 겉잡을 수 없이 카였던 세하지구 택지 개발 파문은 광주시의 사업계획 철회로 이어졌다.

도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가 도면 유출과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개발계획 포기를 선언,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세하지구의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또 광주시 행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도면 유출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6개월여간 투기 광풍이 휩쓸 세하지구의 개발예정지 28만여 평은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돼 시의 방침대로라면 최소 2~3년간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만간 주변 수만여평을 포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투기나 보상을 노린 건물 신

市, '택지개발' 고집 않고 탄력 적용
도면 유출 책임소재 규명 등 과제로

축 및 나무심기 등의 불법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5월 발주된 용역에선 광주 지역의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꼽혔지만 이전 수년간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감시 대상의 땅'이 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속성상 일단 평균 2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오른 땅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들은 거래나 건물신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수가 토지를 그대로 소유할 것이고, 오히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허위 개발 정보를

통해 거래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일단 개발 계획을 포기한 만큼 투기 열풍을 비롯한 사태가 완전히 거리낌없이 기다리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2~3년 내에 사태가 가라앉더라도 반드시 택지개발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택지개발계획을 재추진할 때에는 땅값 동향과 투기 여부 등 사업성을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광주시가 문화복합단지 계획을 수립할 때, 단지 후보지 중 최적지로 꼽았던 곳이 민족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전개 상황에 따라 문화복합

단지 부지나 다른 용도의 개발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 개발계획 도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비롯된 만큼 경찰 수사는 물론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면 유출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도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자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찰 한 관계자는 "개발 계획 철회와 별도로 투기 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등의 조사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주는 미분양 아파트가 1만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년 뒤 개발이 다시 이뤄지면 세하지구에 투기한 사람들을 만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한총리,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

野 "공무원 선거활용" 철회 촉구... 논란 예고

與,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한명숙 국무총리가 법정부 차원의 개헌지원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여당은 국민투표의 찬반운동 방법을 포함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여권의 개헌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총리는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지만 지금은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있고, 대통령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선정국의 핵심장점이 될 수 있는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정부는 특히 이 개헌지원 기구에서 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제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밭의 준비를 하되, 대통령 임기조항 이외의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방향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견을 수렴해 차기 정부에 넘겨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총리는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는 그동안 개헌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온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고, 지난 22일 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선정국의 핵심장점이 될 수 있는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의회 올 첫 임시회

오늘부터 10일간 열려

전남도의회(의장 김종철)가 2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전남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5일부터는 기획행정·경제관광문화·건설소방·교육사회·농수산환경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또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도가 제출한 '농업·농촌·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

/정현식기자 who@kwangju.co.kr

역사에 묻힐 뻔한 '사법살인' 진실 밝혀

'인혁당 무죄' 확정 의미

법원이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유신정권 긴급조치 위반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수사·재판의 위법성과 재판의 오류를 인정했다.

인혁당 사건은 현대사의 암울했던 각종 의혹사건 중에서도 유신정권 시대에 자행된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건이다. 재판은 정치권력에 예속된 사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손꼽혀 왔다. 이번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로 인해 이와 유사한 과거 내각을 모 및 간접 조작사건 등에 대한 재심 및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8명에 대해 사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 재심 기회를 원천 박탈해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유신정권 시절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권 안보 차원에서 희생양이 필요하면 정보기관이 희생자를 선별해 고문과 조작을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검찰은 정보기관의 입맛에 따라 기소, 법원 역시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던 '근대적 형사사법 절차'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재심 판결에 따라 인혁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혁당 사건 변호인들은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8명의 사형수들 이외에 징역 등을 선고받은 인혁당 사건 피고인 20여명과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200여명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간접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강희철(50)씨와 신군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된 '이람회' 사건 관련자들이 낸 재심청구 사건도 작년 6월과 7월 각각 제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개시 결정이 내려져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운태씨 30일 출판기념회서 대선 출마 의지 거듭 밝힌다

강운태 전 의원이 오는 30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오는 3월까지 기존의 대한민국 연대는 물론 전문가 그룹 등의 외부 인사들을 적극 영입,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예정"이라며 "정계개편의 상황을 봄아겠지만 올 상반기 내에는 기존 정당과의 연대 등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2일 강운태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에

서 대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오는 3월까지 기존의 대한민국 연대는 물론 전문가 그룹 등의 외부 인사들을 적극 영입,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 예정"이라며 "정계개편의 상황을 봄아겠지만 올 상반기 내에는 기존 정당과의 연대 등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그동안 봉사활동에 전념했다는 강 전 의원은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도 보이

고 나라의 앞날도 보인다"며 "봉사하는 정치와 봉사하는 정당을 통해 혼탁한 정치권에 맑고 푸른 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서남해안 개발이 이뤄져야 중국 및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진입에 나서야 한다"며 "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제자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2월 1일
첫전도 개강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본원 첨단점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시험 특강

국가직	행정직	세무직	교정직
광주·전남	농업직	소방직	총무직
서울지방직	경찰직	기술직	총무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농어촌 및 도시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 지금 전화한통이면 설치완료
-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21평형 398만원 한전불입금 내선공사비·설치비 보일러포함(온수기 별매)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기름 보일러 월 난방비용 200,000~400,000원 이상 사용가정
- 난방온도 60°C -

심야전기보일러 월 난방비용 약 2~7만원 이면 OK
- 난방온도 90°C -

※(주)경동보일러-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서비스※

구입 문의 광주 062)673-4981
전남 010-9469-9373